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2024.11.22.(금) 조간

배포

2024.11.21.(목)

담당부서

외환감독국
외환검사기획팀책임자
담당자팀장
검사역손성기 (02-3145-7938)
김재연 (02-3145-7947)

금융소비자의 외국환거래 위반사례를 크게 감축하겠습니다.

-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자주 실수하는 위반유형別 「對고객 핵심 설명서」를 제작하여 **쏘은행**에 배포, 고객 안내를 크게 강화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수사기관 통보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 그간 보도자료 배포,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등 對국민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예방 효과가 저조하였습니다.

◆ 이에 금번에는 **홍보대상**을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 지점**으로 변경하고,

- 주로 발생하는 위반유형別로 「對고객 핵심 설명서」를 제작·배포하고, 지점 창구에서 “對고객 핵심설명서”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안내를 강화하는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①단계 (신고대상 여부 확인) 지점 창구에서 해외송금목적 정확히 확인

②단계 (변경/사후보고 이행방법 안내) 지점 창구에서 신고서 접수시, 변경/사후보고 이행방법을 명확하게 안내

③단계 (상호체크) 본·지점에서 사후보고 등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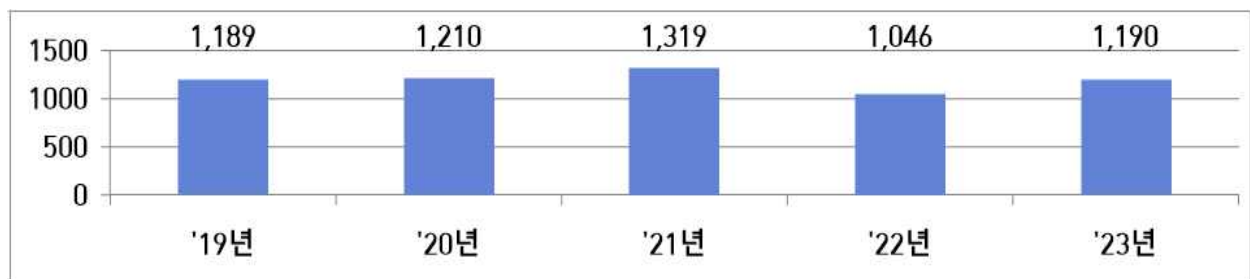
- 아울러, 금번 감축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 간담회**를 개최(11.21일)하여 이행을 독려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외국환거래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행정처분(과태료, 수사기관 통보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I 추진 배경

-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위반하는 경우는 고의/중과실 보다는 대부분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
 - 그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보도자료 배포, 책자 발간 및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등) 등을 지속하여 왔으나, 위반 건수가 줄지 않는 등 예방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였음

연도별 위반접수 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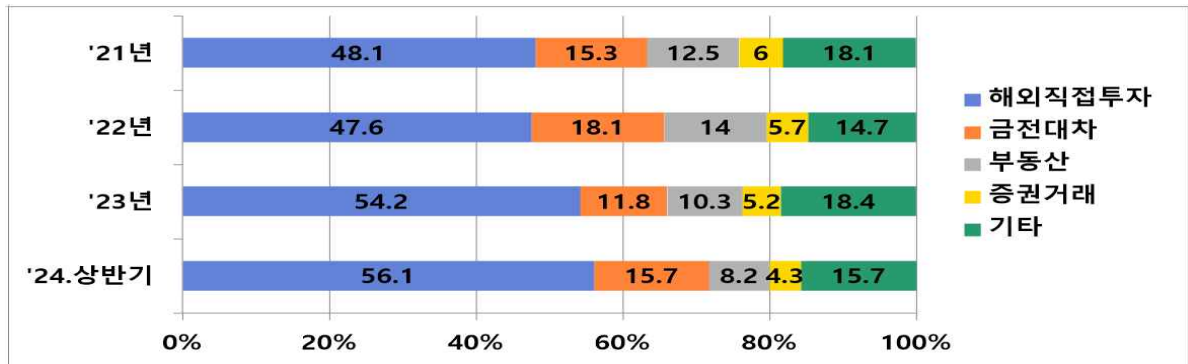
-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은 유형이 정형화되고 위반시기도 집중화되는 등 매년 유사한 패턴이 반복
 - ('23년중 위반유형) 해외직접투자(426건, 54.2%), 금전대차(93건, 11.8%), 부동산(81건, 10.3%), 증권거래(41건, 5.2%) 등이 81.5%를 차지
 - ('23년중 위반시기) 최초신고(397건, 50.5%), 변경신고·보고(313건, 39.8%) 시점에 발생한 위반이 90.3%를 차지

'23년 세부 위반내역 (단위: 건)

구 분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부동산	증권거래	기타	합 계
최초신고	166	47	59	30	95	397(50.5%)
변경신고·보고	224	46	8	11	24	313(39.8%)
사후보고	36	-	14	-	-	50(6.4%)
지급절차	-	-	-	-	26	26(3.3%)
합 계	426(54.2%)	93(11.8%)	81(10.3%)	41(5.2%)	145(18.5%)	786(100.0%)

참고 최근 4년간('21년~'24.상반기) 외국환거래 당사자 위반유형

- '21년~'24.상반기중 위반유형도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부동산, 증권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매년 유사**한 상황



⇒ 위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부동산, 증권거래**의 **최초·변경신고**(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외국환업무 취급시 對고객 핵심설명서**」를 마련

- 한편, 위반사항 대부분이 은행을 통해 접수되고 있어, **은행 지점**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충실히 안내**만 하더라도 위반사항의 상당부분 **예방 가능**

- '23년중 금융감독원에 위규접수된 총 1,190건 중 1,170건(98.3%)이 은행을 통해 접수

⇒ **홍보대상**을 금융소비자와 점점에 있는 **은행 지점 실무자로 변경**

※ **금융회사**가 직접 외국환거래를 하는 과정에서도 **위반 발생**

- '21년~'24.상반기 중 총 101건을 조치하였으며, **금투권역***이 **87.1%**로 대부분을 차지[**자산운용사**(58건, 57.4%), **집합투자기구**(25건, 24.8%), **증권사**(5건, 5.0%), **은행**(5건, 5.0%), **여전사**(3건, 3.0%) 順]

* 금투권역에 대한 설명회('24.11.21. 오전 10시)를 개최하여, 자체점검 등을 통한 내부통제 체계 개선을 유도

II 외국환거래 관련 위반 감축방안 도입

- 「외국환업무 취급시 對고객 핵심설명서*」를 **소은행**에 **배포** 하고, 이를 활용한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을 마련

☞ 「외국환업무 취급시 對고객 핵심설명서」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①단계 (신고대상 여부 확인) 지점 창구**에서 **해외송금목적**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대상 여부 확인**

* (세부이행단계) 지점 창구에서 해외송금업무 취급시 “對고객 핵심설명서”를 활용하여 ①송금목적을 확인 ⇒ ②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 여부 확인

구분	사전신고 대상
해외직접투자	①외국법인에 대해 10% 이상 의 지분을 취득, ②지분투자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추가 로 취득하는 경우 등
부동산	①거주자가 해외부동산 을 취득하는 경우, ②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 을 취득하는 경우, ③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임차 하는 경우 등
금전대차	①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차입 , ②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등
증권거래	거주자 및 비거주자간 증권 양수도 등

- **②단계 (변경/사후보고 이행방법 안내) 지점 창구**에서 **신고서 접수시, 변경/사후보고 이행방법**을 **명확히 안내**

* (세부이행단계) 지점 창구에서 ①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신고서를 접수하고, ②“對고객 핵심설명서”를 활용하여 변경보고(신고) 및 사후보고 이행방법 등을 명확하게 안내

구분	변경보고(신고) 대상	사후보고 대상
해외 직접투자	①해외직접투자한 외국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 설립 , ② 투자금액/소재지/상호 등 변경, ③대부투자 후 1년 이내 회수 하는 경우 등	① 송금 (투자)보고, ② 외화증권 (채권) 취득 보고, ③ 청산 보고 등
부동산	① 취득자금 원천 변경, ② 다른 부동산 을 취득하는 경우 등	① 해외부동산 취득 보고, ② 해외 부동산 처분 보고 등
금전대차	대출기간/금리/상환방법/거래당사자 변경 등	
증권거래	①발행신고서상의 금리/만기/상환방법 변경, ②취득신고서상의 수량/액면가액 변경 등	

- **③단계 (상호체크) 본·지점**에서 사후보고 등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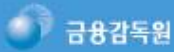
- 금번에 마련한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 ‘24.11.21.(목) 은행권역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국환업무 취급시 對고객 핵심설명서」를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감축방안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
- 향후 감축방안의 이행실태 및 은행별 위반접수 추이 등을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 지도를 강화할 예정

은행권 외국환업무 관련 실무간담회 개요

- ☑ 일 시 : ‘24.11.21.(목) 오후 2시
- ☑ 장 소 :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
- ☑ 참석자 : 쏠은행 본/지점 외국환업무 담당자 등

III 기대 효과

- 쏠은행 지점에서 「외국환업무 취급시 對고객 핵심설명서」를 활용한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면,
-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의 상당 부분이 감축되어 불이익한 행정처분(과태료 등)으로 인한 금융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



외국환업무 취급시

對고객 핵심 설명서



해외직접투자 관련 핵심 유의사항

▷ 사전신고 대상*

- 지분투자** ① 외국법인에 대해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
② 지분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

대부투자 지분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해 1년 이상의 금전대여
*(관련법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변경보고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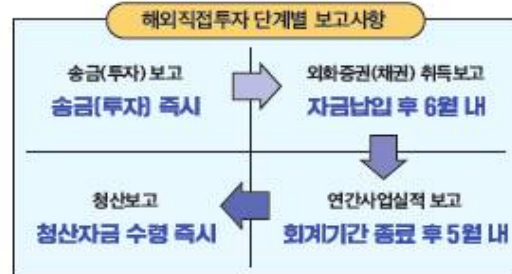
- ① 해외직접투자한 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 설립 및 투자금액 변경
- ②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인의 상호/대표자/소재지 등 변경
- ③ 해외직접투자 내용(현지법인명/소재지/투자액/투자비율 등) 변경
- ④ 대부투자 후 1년 이내에 대여금을 회수
- ⑤ 대부투자의 만기일 연장 등

*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 제8호

▷ 사후보고 대상*

- ① 송금(투자)보고, ②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 ③ 청산보고 등

*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



▷ 유의사항

원칙적으로 해외직접투자(지분투자·대부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사전신고 필요

국내외 부동산 취득 관련 핵심 유의사항

▷ 사전신고 대상*

원칙적으로

- ①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또는 임차(임차보증금 1만불 초과)
- ②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은 사전신고 대상
(다만 신고 의무거액**는 제외)

*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제9-42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제1항, 제9-42조 제1항

▷ 변경신고 대상*

- ① 부동산 취득자금(국내 송금액/현지 조달액/모기지론 등)이 변경
- ② 신고한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을 취득
- ③ 취득한 부동산을 일부 매도하여 지분을 등 변경
- ④ 단독(공동)명의로 신고하였으나 공동(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등

*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제3항

▷ 사후보고 대상*

- ① 해외부동산 취득/처분보고, ② 수시보고 등

* 외국환거래규정 제9-40조



▷ 유의사항

해외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처분대금을 회수할 필요

외국환업무 취급시 對고객 핵심 설명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 부동산, 금전대차, 증권 거래에 대한
핵심 유의사항을 철저히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대차 관련 핵심 유의사항

▷ 사전신고 대상* 거주자의 ① 비거주자로부터의 차입 및 ②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은 사전신고 대상(다만, 신고 예외거래**는 제외)

- *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7-15조, 제7-16조
- ** 외국환거래규정 제7-13조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차입

유형	신고기관	
거주자의 외화차입	영리법인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보고 (5천만불 이하) 기획재정부 신고 (5천만불 초과)
	비영리법인/개인	한국은행 신고
거주자의 원화차입	10억원 이하 차입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10억원 초과 차입	기획재정부 신고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유형	신고기관
거주자의 외화대출	한국은행 신고
거주자의 원화대출	한국은행 신고

*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 1년 미만의 금전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게 자금지급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고

▷ 변경신고 대상*

대출기간/금리/상환방법/거래당사자를 변경하는 경우 등

*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제1항

▷ 유의사항

금전대차를 사전신고하였더라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변경신고 필요

증권거래 관련 핵심 유의사항

▷ 사전신고 대상*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비거주자간 증권양수도 는 사전신고 대상(다만, 신고 예외거래**는 제외)

- *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7-32조
- **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1항, 제7-32조 제1항

증권거래 유형별 신고기관

양도인	양수인(신고자)	신고기관
비거주자	거주자	한국은행 신고
거주자	비거주자	외국환은행 신고 : 비상장·비등록 국내원화증권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 : 그 외*의 경우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원화증권을 증여하는 경우 등

▷ 변경신고 대상*

- ① 증권발행신고서의 금리/만기/상환방법 변경 관련
- ② 증권취득신고서의 수량/액면가액을 변경하는 경우 등

*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제1항

▷ 유의사항

거주자간 증권양수도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은
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 양수인은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